

만리마 속도: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

李春日(著), <萬里馬速度: 金正恩時代朝鮮經濟>, (澳門時間全媒傳播有限公司, 2022)

【요약 및 번역: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

(※ 이 책의 요약은 필자의 동의를 얻어 소개하는 것입니다.)

저자 소개



이 책의 저자인 리춘르(李春日)선생은 현재 중국-아시아 경제발전협회(中國亞洲經濟發展協會, China-Asia Economic Development Association, 약칭 CAEDA) 부회장, 베이징 신홍(新弘)과학기술문화발전 유한공사(北京新弘科技文化發展有限公司)이사장, 중국 교육부 인문사회과학 중점 연구기지-연변대학 조선한국연구센터 겸직교수로 있다. 연변대학을 졸업하고 베이징대학 광화관리학원 EMBA에서 석사,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 베이징 조선족 기업가 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북한 경제특구 법규 해독(朝鮮經濟特區法規解讀)』, 『북한 선군시기 경제건설 노선과 실천(朝鮮先軍時期經濟建設路線及實踐)』 등이 있다. 이 책은 암상자와 같은 북한경제를 이론과 현장을 결합해 북한의 내부경제를 이해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코로나 19 발생 이전에는 매년 수 차례 북한을 방문해 북한경제의 새로운 변화를 심층적으로 연구해 왔다. 특히 2022년 김정은 집권 10년차를 맞아 북한 내부 경제정책의 조정 과정을 면밀히 추적하는 한편 시대적 배경을 분석하고 국제사회와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다. 있다. 특히 북한이 주장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자력자강의 함의,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분석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목 차

제1편 현재 북한의 특징

1. 정신과 속도

- 1). 선군 정치의 사명
- 2). 시대 정신
 - (1) 마식령 속도
 - (2) 만리마 속도
 - (3) 북한 속도
 - (4) 평양 속도
 - (5) 강원도 정신
- 3). 신년사

2. 정세의 변화

- 1). 핵 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 2). 국제 제재압력
- 3). 제재 속의 북한 경제
- 4). 제2의 '고난의 행군' 준비
- 5). 국제관계 개선
- 6). 도전요인

3. 경제의 전환

- 1). 현대화 개조와 국산화 추진
- 2). IT 산업발전 강력 추진
- 3). 대규모 건설
- 4). 주택 건설
- 5). 문화체육생활시설 건설
- 6). 디자인 혁신

제2편 병진노선 시기의 북한 경제

1.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관리 방법

- 1). 새로운 기업관리 방법
- 2).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 3). 포전담당제
- 4). 분배 원칙
- 5). 객관적인 경제법칙 존중

2. 경제발전 전략과 국가의 경제 기능

- 1). 국가 경제발전 5년 전략 계획
 - (1) 전력 문제 해결
 - (2) 석탄공업, 금속공업, 철도운수 집중 발전
 - (3) 기계공업, 화학공업, 건설 부문과 건설자재(建材)부문의 전환
 - (4) 농업, 수산업, 경공업 부문에서 생산 돌격전 전개
 - (5) 국토 관리사업 적극 추진
 - (6) 대외경제관계 확대
- 2). 내각의 기능

3. 공업·광업 기업의 면면

- 1). 금컵체육인(金杯運動員) 종합 식료공장
- 2). '춘향(春香)'과 '은하(銀河)'
- 3). 평양버섯공장
- 4).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 5). 평양 곡산(穀山) 공장
- 6). 장천(將泉)남새전문협동농장
- 7). 미곡(岷穀) 협동농장

4. 인민생활

- 1). 식량 공급제
- 2). 상업시설
- 3). 장마당
- 4). 손전화(핸드폰)
- 5). 택시
- 6). 식당과 목욕탕
- 7). 대동강 맥주
- 8). 명절과 상품 전시회
- 9). 레저
- 10). 군중 체육
- 11). 문예
- 12). 혼례

5. 대외경제

- 1). 외자 유치 정책
- 2).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
- 3). 합영(合營)과 합작(合作)
- 4). 일반 무역
- 5). 가공무역, 기술무역, 서비스무역
- 6). 공업·광업 기업의 대외 협력
- 7). 관광업
- 8). 외국인 투자현황
- 9). 남북 경제협력
 - (1) 개성공업단지
 - (2) 금강산 국제관광
- 10). 세금 제도
- 11). 변호사 사무소

제3편 병진노선 완성 이후의 경제

1. 4월 전원회의

- 1). 조선노동당 제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 2). 병진노선의 완성
- 3). 당의 업무 중심은 경제건설
- 4). 자립경제
- 5). 과학기술과 교육 육성 정책

2. 경제건설 속의 사회주의 원칙 견지

- 1). 생산수단 소유제 형태
- 2). 집단노동의 성격

3. 경제관리에서 기업의 혁신 강조

- 1). 공업·광업 기업의 독립채산제(獨立核算制)
- 2). 생산의 독립성
- 3). 사회주의 경쟁
- 4). 경제 원리 존중

4. 자력자강은 경제발전의 핵심

- 1). 제재 속 자립성 강화
- 2). 자강력 제일주의

5.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경제발전 추동

- 1). 과학, 인재, 교육 중시 방침
- 2). 과학기술과 지식경제
- 3). 과학기술전당
- 4). 원격교육 확대 보급
- 5). 교육, 과학연구와 생산의 일체화
- 6). 첨단기술개발원

6. 개선하고 있는 일부 문제와 난제

- 1). 개선 과정에서의 몇 가지 문제
 - (1) 주인의식
 - (2) 본위주의(本位主義)
 - (3) 평균주의
 - (4) 가격문제
 - (5) 화폐문제
- 2). 난제
 - (1) 내부적 어려움
 - (2) 외부적 어려움

7.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 1). 전면적 성찰(反思)
- 2). 개선(改進) 방향

[부록] 참고자료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개
2. 노동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3. 인민대중 제일주의
4. 일심단결의 위력
5. 조선노동당의 역대 당대표 대회와 당대표자 회의
6. 사회주의 최후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
7. 북한이 건설하는 사회주의 강국
8. 경제 강국 건설 노선
9. 북한의 국민경제 발전 계획
10. 북한의 자원과 인프라
11. 국가 예산의 제정
12. 경제 부문의 구조 개선, 각 부문 간 균형 보장

- | | |
|----------------------------------|--------------------------|
| 13. 국민경제 현대화와 정보화 | 21. 북한의 상업은행 |
| 14. 북한의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 | 22. 대안(大安)의 업무체계와 청산리 정신 |
| 15. 가는 길 험해도 웃으며 가자(路途艱險也 要笑著前行) | 23. 청년 강국 |
| 16.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 | 24. 김일성 종합대학 |
| 17. 70일 전투, 200일 전투, 80일 전투 | 25. 북한의 인재교육 |
| 18. 식탁에서 노동당 만세 소리가 울려 나오게 하라 | 26. 북한의 상표권 보호 |
| 19. 수입병(進口病)을 없애는 것도 사회주의 수호전이다 | 27. 북한의 저작권 보호 |
| 20.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 28. 북한 투자정책 지침 |
| | 29. 중북 경제무역관계 |
| | 30. 남북관계 |

제1편 현재 북한의 특징

경제는 정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치의 전환은 경제의 새로운 변화를 결정한다. 북한은 국내정치의 방향을 전환한 이후 그에 상응하는 경제관리 조치를 취했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에 선군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는 과도기적 성격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제시했다. 북한은 핵무력에 대한 집념으로 핵무력건설을 완성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수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진노선을 채택한 북한의 논리는, 70년간 지속된 한반도의 분단을 종식하려면 강한 미국에 맞설 힘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북한이 대국 사이에 끼인 운명을 바꾸고 싶어하고, 이는 스스로의 강력한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 병진노선을 추진하면서 북한 내부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하나는 미국을 비롯한 외부 세계와의 대결 구도가 역대 최대로 치달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 외부와의 힘겨루기 속에서 병진노선을 고수하면서도 국내에서는 그와 동일한 수준으로 경제건설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핵무력 건설이 과학자와 군부의 몫이라면 일반시민들은 경제건설과 기업관리 개선에 힘썼다. 그 전환의 시점은 2014년 5월 30일, 김정은이 당·정·군 책임자들과의 담화에서 북한식 경제관리 방법, 즉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관리 방법'을 공식 제시한 것이다.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관리 방법의 핵심내용은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와 포전담당제(分組農田負責制)를 전면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기업관리책임제와 기존의 기업독립채산제의 차이점은 기업권한의 범위에 있다.

기존 제도에서 기업은 집행 기능만 있을 뿐 생산 전 과정에 걸친 독립적인 경영권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기업관리책임제는 국가의 권리를 기업에 이양해 기업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생산자의 적극성을 높였다. 연변대 동북아연구원의 김일 연구원은 오랫동안 평양에서 주체 철학을 연구했는데 "북한은 자주·단결·부흥·평화의 새로운 시대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정리했다. 제1장에서는 오늘날 북한의 모습과 시대정신, 경제분야의 성과를 살펴보았다.

1. 정신과 속도

2016년, 조선노동당은 36년 만에 제7차 대회를 열고 향후 5년간의 경제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이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중 경제건설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8년의 조선노동당 제7기 3중대회에서는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정치적 방향의 변화를 분명히 했다. 북한은 병진노선을 성공적 완성했다고 선언한 뒤 경제건설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과연 중국과 베트남처럼 개혁·개방을 할 것인지, 북한의 경제발전모델이 어느 나라와 유사할 것인지 등 문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나 북한은 다른 나라의 경제발전 모델을 따라하지 않고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경제건설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북한이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히 하면서 자력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은 다른 나라의 개혁·개방 모델을 따라하기 보다는, 객관적 경제 원리를 존중하고 끊임없이 경험적 교훈을 정리하면서, 북한식 경제효율 제고방식을 모색하여 스스로의 발전모델을 찾아낼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의 경제발전 모델을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다. 외국의 경험을 겸허히 배우지만 그대로 베끼지 않고 북한에 맞는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1). 선군 정치의 사명

북한이 오랫동안 실행한 선군정치는 선군사상에 기반한다. 외부에서는 보편적으로 선군정치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평가한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선군 기치를 내세우고 국방건설에 집중했는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국제사회는 대 변혁의 시기를 겪었다.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이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민주주의로 전향하거나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면서 북한도 사회주의를 견지 또는 포기할 것인지의 중대한 선택에 직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대 초에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으며, 3년 연속 자연재해까지 닥쳤다. 북한은 역경에서 가장 의

지할 수 있는 것은 인민군대뿐이라고 판단했다. 군대는 혁명의 핵심 역량으로 국가와 인민, 사회주의를 보위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인민군대가 존재하기만 하면 인민의 생명과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김정일의 국방공업 우선 발전전략을 계승하는 핵무력 건설과 경제 건설의 병진 노선을 제기하고, 국방 건설을 강화함과 동시에 경제 건설에도 박차를 가했다. 2013년 3월 3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했다. 이는 김정은 집권 초기의 경제건설 로드맵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외부의 평가는 병진노선이 선군정치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으며, 다른 하나의 노선이 경제건설이라는 점은 언론에서 거의 다루지지 않았다. 병진노선이 북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북한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병진노선이 과연 선군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는지 등 질문에 대답하려면 우선 병진노선을 제기한 배경과 관련 조치들을 알아야 한다.

북한은 국제적 압박을 이겨내고 사회주의를 견지하기 위해 핵무력 건설을 선택했다. 북한이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 국방 건설에 투입하고 핵·미사일 완성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을 때 김정일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했고, '핵무력 완성'은 유훈이 되었다. 핵무력 건설을 완성할 때까지 김정은은 김정일의 유훈에 따라 핵실험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 이와 동시에 경제건설도 '강행군'을 해야만 했다. 북한이 오랫동안 국방 건설에만 집중하다 보니 국민 경제 기반이 취약해져 인민생활의 개선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필자는 2012~2017년을 북한이 김정일의 유훈을 관철시키는 과도기이자 선군정치의 사명을 완수한 역사적 단계로 본다.

2). 시대 정신

북한의 시대정신은 자력자강에 기반한 만리마정신이다. 김일성 시기에 천리마 시대를 열었다면 현재의 북한은 만리마의 속도로 도약하고자 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속도전 운동을 자주 진행했다. 시기별로 전개된 속도전 운동은 사회주의 건설 현장에서 뿔이 나타났는데, 현재 북한의 건설 현장에는 마식령 속도를 비롯한 만리마 속도, 북한 속도, 평양 속도 등의 운동들이 진행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발전하려는 의지를 북한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

(1) 마식령 속도

마식령 속도는 북한의 건설속도를 반영한 새 시대 용어로, 2013년 원산에서 마식령 스키장을 건설하면서 군인 건설자들 사이에서 나온 구호다. 온 나라에 대혁신, 대도약의 불바람을 일으켜 나가자는 마식령 스키장 건설은 김정은이 직접 지시하고 인민군에 맡긴 첫 상징적 건설운동이다. 인민군은 짧은 시간에 이 공사를 완성했다. 같은 해 6월 4일, 김정은은 '마식령 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북한 인민들은 마식령 스키장 군인 건설자들의 투쟁 정신을 배우면서 전국적으로 '대혁신, 대도약'의 건설 붐을 일으키고 있다.

(2) 만리마 속도

2015년 12월 28일, 김정은은 조선인민군 제3차 수산부문 열성자 회의 연설에서 만리마시대를 처음 언급하고, '천리마 시대, 만리마 시대인 오늘날에 안일하고 정체된 것은 잠시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집권 첫 7년간 건설한 건물 총량은 이전 70년간 건설한 건물 총량에 육박했다. 평양뿐 아니라 신의주·나선·혜산·원산·개성 등 지역에 대규모 건설현장이 들어서고, 주택·공장·발전소 등 건설사업들이 진행되었다. 2016년 북한은 70일 전투, 200일 전투 등을 강조하며 만리마 속도를 가속화했다.

(3) 북한 속도

2014년 군인 건설자들이 흑한 속에서 동해의 항구에서 방파제, 부두 등 해상 건설 공사를 2개월 만에 끝냈다. 김정은은 이곳을 현지 시찰하면서 "북한 속도"라고 높이 치하했다. '북한 속도'가 지방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4) 평양 속도

2015년 1월 13일, 김정은은 평양시 당위원회 간부들과 대화하면서 평양시에 '평양정신', '평양속도'를 만들어 당 정책 관철에서 모범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같은 해 2월 김정은은 미래과학자거리 건설부지를 시찰하면서 1차 공사 중인 주택과 공공건물을 신속하게 건축한 것을 두고 "이게 바로 오늘날의 평양 정신, 평양 속도"라고 극찬했다. 새로운 '평양 정신' '평양 속도'를 추진하는 동안 평양에는 단기간에 현대화된 생산체제를 갖춘 단위(기업, 공장)가 많이 생겨났다.

(5) 강원도 정신

'강원도 정신'은 북한 지도자가 2015년 강원도 원산 군민발전소를 시찰하면서 등장한 시대 용어다. 강원도 정신의 핵심은 모든 것을 중앙에만 기대지 말고 지역 역량에 의지해 지혜를 모으는 것이다. 강원도의 정신을 추진하면서 원산구두공장, 송도원 캠프, 고산과수종합농장 등 모범기업이 생겨났다.

3). 신년사

신년사는 지도자의 의지와 구상이 반영된 당해의 집권 강령이다. 북한 지도자가 매년 신년사를 통해 새해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온 국민이 신년사를 열심히 배우고 관철하는 것이 북한의 중요한 생활상이 되었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2018년 신년사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급호전된 것이다. 2018년 초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었고 이를 계기로 국제무대에서 획기적인 교류가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신년사에서 비롯되었다. 국내에서도 신년사를 관철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전방위적으로 경제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신년사에서는 국제사회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해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호소했다. 2019년 새해에 김일성 광장에서 신년맞이 야외공연이 열렸는데 이는 북한의 새로운 변화를 의미한다. 김일성 광장은 군중집회나 대규모 열병식을 거행하는 정치적 장소인데, 2019년에는 문화광장의 성격이 더해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 호텔에 전시된 사진으로도 엿볼 수 있다. 과거에는 수령을 칭송하는 사진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2019년부터는 인민 생활을 소재로 한 사진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인민이 중심이 되는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준다.

2. 정세의 변화

1). 핵 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북한은 2006년의 1차 핵실험 이후 총 6차례의 핵실험을 진행했다. 2017년 9월 3일, 북한은 제6차 핵실험 이후 핵무기 완성을 선언했다. 2017년 11월 29일 북한은 정부성명을 내어 "조선노동당의 정치적 결단과 전략적 결심에 따라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을 7월에서 두 차례 발사했다.

국제사회는 한반도 비핵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무기와 운반능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완전한 핵 폐기와 핵 동결 사이에서 첨예

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북미 협상의 결과에 달려 있다. 그러나 필자는 북한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북한이 핵무력 건설을 완수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이 이를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에 충분한 신뢰를 주지 않는 이상, 북한이 수십 년에 걸쳐 이뤄낸 성과를 쉽게 버리지 않을 것이다.

2). 국제 제재압력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유엔은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호(2017), 2371호(2017), 2375호(2017), 2397호(2017) 등 다양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켜 정제유 수입량을 줄이고 석탄 및 직물 수출을 전면 금지해 북한의 생명선을 압박했다. 중국도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고, 2017년 9월 28일 중국 상무부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2375호 결의안 18조에 따라 북한과의 합작·독자 사업을 120일 이내에 전면 폐쇄할 것을 요구해 북한 대외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북한은 왜 핵무력 건설을 강행하는가? 필자는 북한이 핵무력 건설에 나선 이유는 분명하다고 본다. 북한은 미국이 70여 년 동안 한반도의 분단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군사력에 기반한 것이며, 따라서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3). 제재 속의 북한 경제

북한은 제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력갱생, 자력자강이라는 방법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북한 지도자는 북한 실정에 입각해 과감한 북한식 경제관리방법을 채택하여 탈출구를 찾았고 오랫동안 침체되었던 북한 경제를 점차 회생시켰다. 2014년 5월 30일 김정은은 당·정·군 간부들과의 담화에서, 공장과 기업에 기업 책임 관리제를 도입하고 협동농장에서는 포전담당제제를 시행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북한식 경제관리방법의 실질은,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선에서 국가가 예전처럼 구체적인 생산계획을 세우지 않고 생산단위에 자율경영권을 주는 등 생산의욕을 고취시킨 것이다. 이를 통해 공장과 기업은 국가 할당량 이외의 초과 생산분을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격려정책으로 북한은 강도 높은 국제 제재 속에서도 오히려 국내총생산량이 증가했다.

4). 제2의 '고난의 행군' 준비

국제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정면 돌파 동원령을 발동하고 '고난의 행군'을 진행할 각오까지 다지고 있다.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북한은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은 왜 이런 선택을 하는가? 그들은 미국과의 진정한 대항력을 갖추어야만 70여 년에 걸친 분단의 역사가 끝나고 자주번영의 꿈도 하루빨리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붕괴될 수 있다는 예상은 북한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5). 국제관계 개선

미국과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강도를 높이고 있는 사이, 북한은 돌연 핵 무력 건설을 완성했다고 선언하고 곧바로 국제사회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고, 국제사회는 북한의 변화를 받아들였다. 북한은 불과 1년여 만에 국제환경을 완전히 바꾸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각 국 정상들을 만나며 빈번하게 외교활동을 진행했는데, 지금까지 북남 정상회의 3회, 북중 정상회의 5회, 북미 정상회담 3회, 북러 1회, 북-베트남 1회, 북-싱가포르 1회 등 회담을 열었다. 특히 북한은 미국이 북미 대화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와 탄도를 보유했기 때문이며, 북한의 핵 억제력이 가장 중요한 협상 카드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6). 도전 요인

국제제재로 인한 타격과 코로나 19 방역으로 인한 국경폐쇄가 더해져 북한의 대외경제가 붕괴 직전에 다달았다. 북미관계는 2019년 2월 28일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부터 냉각기에 들어섰고, 북미 간 줄다리기는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를 보면, 북한은 한국이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사사건건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같은 민족끼리 분단 70년을 해결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2020년 6월 16일에 북남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북한은 이 같은 난국을 단기간에 돌파하기 어렵다 판단하고 2019년 말의 노동당 제7기 5중전회에서 '정면돌파전'을 선언했다.

3. 경제의 전환

1). 현대화 개조와 국산화 추진

김정은은 산업생산의 국산화 문제, 특히 자력자강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산화를 실현하는 것은 북한의 필수적 선택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북한이 강조하는 현대화 개조는 주로 국산화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국산화의 비율이 곧 국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현대화 개조 '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북한이 새로운 설비를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고,

외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이 쉽지 않고, 또 국제제재까지 겹치면서 국산화의 길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처한 상황이 장비의 국산화, 원재료의 국산화를 결정했기에, 이는 현명한 선택이라 보여진다. 북한 현대화 개조는 공장건물 시설 개조와 기계설비 갱신을 의미하는데 대부분의 공장건물과 설비가 노후화되어서 국산화를 위해서는 현대화 개조가 필수적이다.

2). IT 산업 발전 강력 추진

북한은 시대흐름에 발맞춰 국가 차원에서 첨단기술 산업 발전을 중시하고 우수한 IT 인력을 양성하고 IT 산업 관련 기업들을 대거 배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이 평양컴퓨터센터, 평양정보센터,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기술연구원 등 있다. 북한은 이미 컴퓨터 등 현대화된 정보기기를 자체 생산하는 수많은 기업을 설립해 주요 기관의 광케이블화를 실현하고 3세대 이동통신망을 구축해 디지털 경제의 기초를 닦았다. 또한 핵개발과 로켓 실험에 참여한 연구자들을 민생 경제영역으로 전환하여 IT산업화를 진행해 민생경제의 과학기술화 수준을 크게 높였다. 최근 북한 인민무력성 산하의 일부 부대가 민생 영역으로 집단 이동해 경제 영역의 과학기술화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것이 북한 경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휴대전화 보급량은 700만 대를 넘어섰으며, 통신망은 아직 3G에 머물러 있지만 4G를 건너뛰고 5G 시대로 직행할 계획이다. 다만 제재로 장비 수입이 불가능해져 통신장비 업그레이드가 지연되고 있다.

3). 대규모 건설

북한의 최근 몇 년간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가 곳곳에서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변화는 북한 주민들의 자신감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평양의 조선혁명박물관은 새 시기의 사회주의 혁명이 이룩한 성과를 전시하고 있으며 2012~2015년 신축한 건물 목록을 볼 수 있다. 3년간 건설된 건물 수만 봐도 북한이 건설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마식령 스키장,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 삼지연관광지구, 원산갈마국제해안관광지구 등이 있다.

4). 주택 건설

북한은 일반 주민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알려진 북한의 건설 사업으로는 창전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리명거리 등 있다. 이 사업들은 국가가 과학자와 교육자의 주택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주택해결사업은 전국 각지에서 모두 일어나고 있다. 나선·신의주·원산·개성 이외의 농촌

지역에서도 새로운 주택이 많이 생겨나 지역의 모습이 바뀌고 있다. 북한은 제8차 당대회에서 향후 5년간 매년 10,000채씩, 총 50,000채의 주택을 평양에 건설할 것을 제시했다. 2021년 3월, 김정은은 평양시 주택 1만 채 건설공사 기공식에 참석했다.

5). 문화체육생활시설 건설

북한에 새로 지은 문화·오락·레저 장소가 많아지고 있으며, 시설이 선진적이고 규모가 크다. 대표적인 장소로는 평양문수물놀이장(平壤紋繡水上樂園), 능라도 놀이공원(綾羅島人民遊樂場), 유경원(柳京園), 미림승마장(美林騎馬場), 금릉헬스관(錦陵健身館) 등이 평양시민들을 위한 문화오락시설이다. 주목할 점은 지역사회의 공공체육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료로 이용하는 것으로 기존의 무료 이용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6). 디자인혁신

최근 북한에서 '디자인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 전반에 걸쳐 제품과 제품 포장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이미 산업디자인 발전 체계를 갖추고 대학에도 산업디자인학과를 신설했다. 디자인 방안은 국가설계원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제2편 병진노선 시기의 북한 경제

2013년 3월 31일,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제시했다. 병진노선은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초기에 제시한 국가발전노선으로 북한의 자강력을 보여주는 국가방침이다. 이 시기는 북한이 선군정치 사상을 계승해 국방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동시에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기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모든 간부와 당원, 노동군중이 병진노선을 확실히 관철하고 경제강국 건설에 건설적 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취약한 경제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과감하게 새로운 경제정책, 즉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관리 방법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1.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관리 방법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관리 방법은 전통적인 계획경제의 기반 위에서 중대한 조정을 거친 새로운 경제관리 방법이다. 핵심은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견지하여 집체주의를 구현하는 것을 전제로, 경제 관리의 권한을 기업에 위임하는 것이

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경제 관리, 생산, 경영 활동에서 국민경제계획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2014년 5월 30일, 김정은 위원장은 당·정·군 지도간부들과의 담화에서 북한식 경제관리 방법을 재규정하고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포전담당제 시행을 지시했다. 새로운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관리 방법을 통해 기업이 국가계획의 틀 안에서 생산과 판매를 책임지고, 계획 이외의 이익은 기업이 스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적극성을 극대화했다. 국가 생산재료를 모두 사용하는 기업은 이익배분에서 통상 국가에 30%를 납입하고 나머지 70%는 스스로 사용할 수 있다. 협동농장 역시 같은 분배 방식으로 국가에 납입 후 남는 부분은 농장의 소유가 된다. 농장들은 노동에 따라 분배하기 때문에 자연히 농가들의 소득이 증가했다.

1). 새로운 기업관리 방법

북한은 김정은 집권시기에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도를 제기했는데, 이는 과거 경제채산제에 비해 기업들에 더 많은 경영권을 부여했다. 기업에 실질적인 경영권을 부여하는 것을 통해, 기업이 스스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현대정보기술 수단과 과학적 관리기법을 활용하여 수익 극대화 방안을 찾도록 했다.

2).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가 시행된 이후 기업들은 이전보다 더욱 다양하고 구체적인 책임과 권리를 누리게 되었으며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했다. 기업은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의 요구에 따라,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경제 전략을 제정하여,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기업 경영 활동을 하고 있다. 과거 국가 차원에서 구체적인 생산지표를 제시하고 원료와 연료를 공급했다면 이제는 기업 스스로 경영전략을 세워 기업경영의 전략과 목표, 대책을 세워야 한다.

3). 포전담당제(分組農田負責制)

포전담당제의 핵심은 책임을 더욱 세분화하고 농업의 생산 단위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즉 협동농장의 책임과 권리를 분조에 위임하고 조별로 농업 생산을 하는 경영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협동농장의 소조는 작업반이라고 하는데 1개 작업반의 노동력은 평균 10~15명이다. 포전담당제는 작업반 내에서 시행되며, 생산과정에서 각 농장원의 책임범위를 엄격히 구분한다. 농장원들이 각자의 책임구역을 관리하고 경쟁하면서 생산 적극성을 높이고 있다.

북한이 포전담당제를 시행하면서 이전보다 다산(多産) 한 농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농장원은 1헥타르 토지에서 보리와 밀 18t을 생산해 비료 등

국가 공급 비용 제외하고도 분배권에 따라 다른 농민보다 갑절의 수익을 올렸다. 국가의 몫을 상납하고 토지등록에 따라 종자개발, 토양, 비료, 연료, 트랙터 등의 사용료를 제외한 차익은 농민들의 수익이다.

북한의 농업문제는 오랫동안 가장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해결이 어려운 문제인데, 최근 몇 년간 증산은 커녕 오히려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 주요 원인은 심각한 종자 퇴화와 비료 부족이다. 국가가 농장에 제공하는 화학비료는 전체 수요의 80% 미만이며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농장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4). 분배 원칙

사회주의 국가에서 실시하는 분배 원칙은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노동에 따른 분배 원칙이 오랫동안 제대로 실현되지 않아 노동 적극성이 억제되었다. 현재 북한 사회주의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이행하는 주요 문제는, 과학적인 노동관리체계와 노동량에 따른 분배 메커니즘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노동량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분배를 하는 것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5). 객관적인 경제법칙 존중

최근 몇 년 사이 북한에서 객관적 경제법칙을 존중한다는 표현이 나온 것은 질적 변화로 볼 수 있다. 북한 사회주의 경제관리 방법이 도입됨에 따라 기업에는 자율적인 경영권을 부여하고, 기업 지도간부들에게는 경제의 객관적인 법칙을 존중하고 경제원리에 따라 사업을 전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는 2018년에 '경제의 원리 문제'라는 책을 출판했다. 책에서는 수요와 공급, 과학기술과 경제, 축적과 소비 등 경제학 원리를 다루었는데, 책 서문에서 "이 위대한 경제강국 건설사업을 완성하려면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의 가르침에 따라 객관적인 경제법칙에 따라 경제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많은 기업 경영자들이 경제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국제사회와 더 많은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없고, 외자유치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2. 경제발전 전략과 국가의 경제 기능

1). 국가 경제발전 5년 전략 계획

북한 노동당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2016~2020년 국가경제발전 5년 전략계획을 발표했다. 국가 경제 발전 5년 전략 계획은 국가 경제 발전의 전

략 목표, 중심 임무와 각 부문의 임무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내놓았다.

(1) 전력 문제 해결

북한 인프라 중 가장 부족하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전력 문제이다. 국가발전 5년 전략목표에서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전력 문제이다. 북한 김정은도 매년 신년사에서 전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북한은 모든 자원을 집중해 전력 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느 정도 개선되었지만, 국민경제의 현대화와 정보화 과정에서 전력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전력공급이 여전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2018년 4월부터 집집마다 전기계량기를 설치해 실제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을 납부했다. 과거에는 전기를 공짜로 사용했기에 전기를 아껴쓰지 않았는데, 전기요금을 받는 등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전력 사정이 크게 호전되었다.

(2) 석탄공업, 금속공업, 철도운수 집중 발전

북한 석탄공업의 과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채탄하여 더 많은 석탄을 빨리 채취하고 공업부문과 민생의 수요를 보장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야금 부문의 경우 강철 생산량을 높이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북한의 야금 설비는 노후되어 있어, 현대화 설비로 낡은 설비를 대체하고 생산능력과 강재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북한은 화물운송의 대부분을 철도에 의존하고 있다. 증가하는 운송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집중적인 단일한 배차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송시스템을 과학화, 합리화해야 한다.

(3) 국토 관리사업 적극 추진

북한 산림은 국토면적의 80%를 차지하는 중요한 자연자원으로, 북한은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것을 매우 중시해왔다. 북한 고난의 행군·강행군 때 나무를 남벌하는 일이 많아 산림복구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북한은 자원개발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특히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규제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4) 대외경제관계 확대

북한은 무역과 국제협력을 중시해 관련 법규를 정비(完善)하고 대외 경제협력과 관련한 법규를 여러 차례 개정해 왔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수출입 무역의 불균형 및 하나 혹은 두 개의 나라에 편중되어 있는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다. 수출품목에서 광산류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 국가 차원에서 무역구조를 개선하고 가

공품 수출, 기술 무역, 서비스 무역의 비중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여러 경제개발구 건설을 시도했다. 2013년 5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이 통과되었고 2020년 까지 29개의 특구와 개발구를 조성했다. 그러나 이들 특구는 제대로 된 개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가 차원에서 경제특구와 개발구 개발 발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으니 앞으로 개발구 관련 조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

2). 내각의 기능

북한은 다른 이해부처들에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내각의 경제지휘권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내각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조선노동당 제7차 당대회에서 처음으로 내각이 경제전선의 사령부로 제시되었다. 이는 선군정치에서 경제건설 중심으로 전환되는 역사적 전환기에 제시된 것으로, 국가자원을 주로 국방건설에 사용하던 것을 경제건설을 위해 인민경제영역으로 이전한다는 의미이다. 몇 년간의 노력으로 국가자원이 민생에 사용되는 비율이 커졌다.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내각이 경제사령부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는 동시에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경제통치관리 기능의 회복을 강조했다. 이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특수부처가 각종 명목으로 독점적 특권을 누리면서 국가경제 각 부처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공업·광업 기업의 면면

북한은 병진노선 시행 과정에, 경제분야에서 기업책임관리제 등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았는데, 이에 힘입어 공장들과 기업들이 현대화를 추진하고 국산화를 진행하면서 성공한 기업들이 배출되었다. 필자는 평양에서 직접 방문한 대표적인 기업들로는 금컵체육인(金杯運動員) 종합 식료공장, '춘향(春香)', '은하(銀河)', 평양버섯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평양곡산(穀山) 공장, 장천(將泉)남새전문협동농장, 미곡(岬穀)협동농장들이 있다. 상기 기업들의 국산화과정, 브랜드 관리, 경영전략 등이 책에서 자세히 소개되었다.

4. 인민생활

이기성 북한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국제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2017년 북한의 GDP는 307억 400만 달러, 1인당 GDP는 1214달러로 2016년보다 3.7% 증가했다. 평양의 평균 임금은 몇 년 전 3000~5000원(북한원)이었지만 지금은 15만원(북한원) 정도로 인상됐고, 어떤 단위에서는 40만

원(북한원) 선까지 지급되었다. 소득의 차이는 경쟁을 가져왔으며, 경쟁의 결과 제품의 질이 향상되고 소비 수준도 높아졌다. 주목할만한 현상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1). 식량공급제

북한은 주민들에게 식량 등 필수품을 제공해 왔는데, 성인은 700g/일, 학생은 500g/일, 일거리가 없는 사람은 300g/일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국가의 식량 공급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기업복지 또는 자체적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경제 분야 종사자들은 기본적으로 식량 문제를 소속 직장에서 책임진다. 2018년 평양의 근로자 평균 임금은 15만원(북한원) 정도이고 제공하는 복지는 최저임금의 20% 정도다. 좋은 직장의 경우 직원 복지와 임금이 상당한 수준일 때도 있다. 국가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공장기업 스스로 직원 복지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고, 비생산적인 기관·단체는 여전히 국가의 배급체계에 의존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소득이 높아지고 상품 공급이 풍부해지면서 국가 배급에 의존하는 현상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2). 상업시설(商業網點)

북한의 상업 시설은 상업성이 일괄 관리하고 국가의 상품공급은 이를 통해 이뤄지지만 국가공급이 갈수록 줄어들고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상업 시설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두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국가의 공급에서 시장화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단일한 국영 상업시설에서 다양한 형태의 편민상업시설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광복거리의 상업중심, 보통강 상업중심 등이 있다.

3). 장마당(農貿市場)

북한의 장마당은 공급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비공식적 상업유통 경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필수 생활용품 유통경로로 자리 잡았다. 2002년 7월 1일, 북한에서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채택한 이후 평양에서 처음으로 골목장을 허용했고, 이후 장마당을 규범화하면서 통합 관리하고 있다. 북한 학자들은 장마당의 성격에 대해, 국가 공급이 부족할 때 보조적 기능을 할 뿐, 향후 계획경제가 정상화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 보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장마당은 이미 보조적 지위를 넘어 상품 공급에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시중에서 파는 생활용품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저렴하고 흥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4). 손전화(휴대전화)

북한은 10년 가까이 휴대전화를 사용해 왔으며, 현재 가입자 700만 명, 인구 비율로는 30% 가까이 보급하고 있으며, 이 중 스마트폰 가입자가 70%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북한 사람들은 3G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5G 보급을 준비하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에 북한이동통신연구소가 있는데 5G를 집중 연구하고 있다. 현재 통신 지능화를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북한판 위챗 시스템도 개발돼 정책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다만 사진과 동영상 전송을 허락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어 바로 승인되어 실생활에 적용되기는 어렵다. 현재 북한의 휴대전화는 사진이나 녹화 등은 할 수 있지만 이미지와 동영상 자료는 전송할 수 없다.

5). 택시

현재 평양의 택시는 3500대 수준으로 늘어났고, 10여 개 렌터카 업체가 경쟁적으로 차량을 투입하는 등 고경쟁 업종으로 변모했다. 택시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났고, 승객이 늘어난 것은 물론 택시를 이용해 물건을 나르는 사람도 많아졌다는 뜻이다.

5. 대외경제

북한의 대외경제는 대외경제성이 맡고 있으며 대외무역과 투자유치를 담당하고 있다. 북한의 외자 유치 정책은 투자 허용, 투자 독려, 투자 제한, 투자 금지 등 네 가지다.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는 분야는 공업, 농업, 건축, 교통, 통신, 과학기술, 관광, 금융 등 전방위적이다. 투자를 독려하는 분야는 하이테크,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제품 생산, 인프라, 연구 및 기술개발 부문이다. 투자가 제한되는 분야는 가공 없이 자원을 직접 수출하는 사업, 음식점·상점 등 서비스업 사업이다.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는 국가안보를 저해하고 주민의 건강을 해치며 사회도덕생활을 훼손하는 사업, 친환경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기술이 낙후된 사업,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 등이다.

북한의 대외경제는 대외무역과 투자로 나뉜다. 과거에 생산 기업들은 직접적인 수출입권이 없고 반드시 정부가 지정한 무역회사를 통해 수출입 업무를 처리해야 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공업 광업기업들이 모두 직접 무역거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으며, 스스로 경로를 찾아 무역거래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투자유치는 일반투자유치와 경제개발구 투자유치로 나눌 수 있는데, 개발구 투자유치 성공사례는 아직 뚜렷하지 않지만 개발구 활성화를 통한 해외 선진기술과 자

금융치에 북한 정부가 힘을 쏟고 있다.

1). 외자 유치 정책

1991년 나선경제무역특구 설립과 동시 북한은 처음으로 투자 장려 혜택정책을 채택했다. 외상과 북한기업의 합작에 관하여, 관련 규정이 갈수록 세분화되어가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의 출자비율은 합작 양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며, 외국인투자자의 출자금액 제한은 없다. 외상 투자 기업은 공장 건설과 경영에 필요한 물자에 대한 수입관세를 면제해주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제품 수출 역시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첫 4년간의 경영손실을 다음 연도로 이전할 수 있고, 감가상각 가속화, 토지비용 감면, 수출입 권리 부여 등 경영방면의 우대정책이 점차 세분화되고 있다. 부동산 임대기간은 최대 50년이다. 토지 임대료 관련 세부 규정도 책정되어있다. 노동력 보장 제도 방면 관련 내용은 북한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되 계약서에 지정된 관리자와 특수 직종의 기술자, 기능직은 외국인으로 채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은 하루 평균 8시간, 주 6일, 일 년 270일 이상이며, 외국인투자기업에 채용된 일반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일반 부문 30€/월(유로), 채광 부문 80€/월(유로)이다.

필자가 요해한 바에 따르면, 최근 국가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새로운 법규와 정책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2).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

1991년 12월 28일 북한은 정무원 결의로 나선경제무역지구를 제1호 경제특구로 지정했다. 북한은 이때부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대외 경제활동을 시작했다. 나선경제무역지구는 북·중·러 3국 접경지이며 토지 면적은 746km²이다. 2002년 금강산 국제관광특구와 개성공단이 가동되면서 남북 간 경제교류가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2010년과 2016년 남북 간 두 차례 분쟁이 발생한 뒤 경제협력구 가동을 멈추었고 현재까지 협력이 중단된 상태다.

북한은 현재 총 29개의 외국인 투자경제구역이 있다. 개발구를 주관하는 행정기관도 이에 맞게 조정되었다. 2015년에 국가경제협력개발위원회를 해체하고, 대외경제성 산하에 대외경제협력부문과 경제특구지도위원회를 설립했다. 북한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의 법률 법규와 관리·투자 유치 패턴은 중국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3). 합영(合營) 과 합작(合作)

북한은 합영·합작에서 북한 기업이 경영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경영과 관련된 기회와 사업을 북측이 주도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북한이 법률적으로는 외국기업과의 합영과 합작 등 다양한 경제 협력을 장려하고 있지만, 사실상 합작기업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합영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더 엄격하고, 특히 북한기업에 대한 요구가 더 높다.

4). 일반무역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 정부는 자질 있는 무역회사에만 대외무역을 허용했고, 일반 기업은 모두 의뢰방식으로 수출입을 진행해왔다. 당시 북한에는 700여 개의 무역회사가 대외경제성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제한된 자원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조달하면서 계획적으로 대외무역을 수행했다.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은 광산 자원이고, 북한의 주요 수입 품목은 석유, 코크스, 생고무, 첨단기계설비 및 선진 기술 등이다.

5). 가공무역 , 기술무역 , 서비스무역

북한 정부는 북한 기업들에 대해 가공·기술·서비스 무역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무역능력을 가진 기업이 얼마 되지 않고, 국제제재의 영향으로, 아직 규모를 이루지 못했다.

6). 광공업 기업의 대외협력

2014년 기업 책임 관리제를 실시한 이래, 정부가 모든 광공업 기업에 무역권을 부여한 후, 기업은 독자적으로 대외 무역과 합영 합작 사업을 추진했다. 북한이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정책은 국가가 생산계획만 정해주고 나머지는 공장 및 기업들이 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원료, 제품의 생산·판매 등 모든 부분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무역회사와 광공업기업은 일종의 경쟁관계가 되었다. 무역회사는 새로운 발전모델을 모색하고 있으며, 무역회사에서 일반기업으로 전향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이 있다.

7). 관광업

북한에서 가장 잠재력이 큰 산업은 관광업일 것이다. 평양, 개성 등 유명한 관광지역 이외에도 금강산, 묘향산, 백두산, 구월산, 칠보산 등 명산과 동해 해수욕장 온천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전통적인 관광명소 외에도 북한의 관광특구와 경제개발구 형태의 새로운 관광지구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김정은이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는 삼지연관광지구와 함께 향후 북한의 중요한 관광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

는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 우선 호텔 객실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평양 시내에서 외국 방문객을 받을 수 있는 객실 수가 3500개에 불과하다. 국제 항공선과 국제열차 편수도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는 중국 베이징(北京)·선양(沈陽)·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왕복하는 국제 항공편과 베이징(北京)·평양(平壤) 국제열차 밖에 없으며, 열차는 매주 6편, 매번 두 칸씩 운행한다.

8). 외국인 투자현황

북한에서 허용되는 외국인투자기업 유형은 외국인 기업, 합영기업, 합작기업 등 세가지가 있다. 2014년 북한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기업은 모두 371개였는데, 이후 현재까지 외국 투자기업 수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2017년 9월 28일, 중국 정부가 북한의 중국 합영, 합작기업들을 철수시킨 후 북한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눈에 띄게 줄었다.

9). 남북경제협력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6·15 남북공동선언'을 체결했다. 이후 북한은 군사분계선에 개성공단을 설립하고 또 금강산관광지구를 비롯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특구들을 만들어 한국과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한국 관광객의 북한 관광이 부분적으로 허용되었다.

(1) 개성공업단지

2003년부터 2016년 초까지 정상적인 협력이 추진되는 동안, 개성공업단지에 입주한 한국 기업들은 북한의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을 고용하여 투자수익률이 30배에 달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전면협력 종단을 선언한 이후 개성공단은 아직까지 재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 금강산 국제관광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 국제관광은 개성공단보다 앞서 개방되었다. 그러나 현재 남북 간 경제협력의 상징이었던 금강산 국제관광은 남북관계 악화로 인해 유명무실해졌다.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에 고성향 해안관광지구, 비로봉 등산관광지구, 해금강 해안공원지구, 체육문화지구를 조성하여, 금강산 일대를 세계 일류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10). 세금 제도

1974년 세금 제도 폐지이래, 북한 국내 기업과 개인은 모두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북한에 투자한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외국기업의 수가 많지 않아, 아직까지는 세무제도가 보편화, 정상화되지 않았다.

11). 변호사 사무소

현재 북한에는 변호사 사무소 4곳, 특허사무소와 상표사무소가 각 2곳이 있다. 북한에서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독립된 업종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변호사 자격 시험 없이 대학에서 법률을 전공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다. 그러나 외국 상인과의 거래가 늘어날수록 분쟁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한 북한에 변호사 사무소가 생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변호사 제도가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특허사무소와 상표사무소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개념이다. 저자가 요해한 바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은 이미 상표등록 관련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회사들이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하여, 협력조약을 체결했으며, 특강 등 여러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3편 **병진노선 완성 이후의 경제**

2018년 4월 평양에서 열린 북한 노동당 제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는 4월 전회라고도 불린다. 4월 전회를 기점으로 북한은 선군정치에서 선민(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로 전환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였으며, 경제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병진노선 완성 이후의 경제는 4월전회 이후의 경제를 뜻하며,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새로운 경제관리 방법을 채택하며 과학기술 역량에 의존하여 자력자강의 경제건설을 시도한 것이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과학기술과 교육역량을 기반으로 한 경제건설 과정에서, 사회주의 원칙(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 집단노동)을 고수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도입했다.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 관리 방법에서 기업 창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업에 경영권 이양해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했으며, 법률 및 제도적 차원에서 기업의 생산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기업들은 제품의 품목과 생산량에 대한 결정권을 갖게 되었으며, 기업 간 경쟁도 나타났다. 원자재 수입, 인재 영입, 기업 내 생산 경쟁 등을 포함한 다양한 경쟁을 통해 기업의 제품 품질이 향상되었고 품목도

다양해졌다.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끄는 포장 디자인에 신경 쓰면서, 포장인쇄업계도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 외에도, 경제 관리에서 북한이 수급관계의 기본원리를 받아들인 것도 전환적 의미를 가지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북한 기업들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중이며, 다 품목 소량 생산을 통해 다양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다.

2019년 4월 11일,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의 '시정연설'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고 '자력경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북한은 자강(自強)을 경제발전의 핵심으로 보고 있으며, 국제제재 등 외압에도 '자강력 제일주의'를 기치로 내세우고 있다. '자력갱생'의 의미도 과거와 차이가 있다. 과거의 '자력갱생'은 대외경제협력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내부 자원만으로 버티겠다는 의지였다면, 지금의 북한은 외국의 선진 기술을 적극 도입해 국산화의 길을 걷고자 하는 것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은 인재와 과학기술 역량을 원동력으로 삼아 경제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내에서는 과학·인재·교육을 중시하는 일련의 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과학자 복지 향상(연봉초과 학자휴양소 건설), 대학 내 원격교육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고등교육 보편화 추진, 교육 의무연수 12년으로 확대, 학제 개편 등 정책이 있다. 북한은 첨단 기술 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구축해야만 과학기술과 교육을 통해 지식 경제시대의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겪고 있는 북한에서 전에 없던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이 경제정책 조정을 통해 생산 적극성을 제고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화폐문제, 주인의식, 본위주의, 평균주의, 분배문제, 가격문제 등에서는 갈등과 문제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간부의 주인의식 부족 즉 관리자의 선도적 역할이 인민의 기대의 부응하지 못하는 점; 둘째, 본위주의 현상으로 간부들이 자신의 이익과 맡은 업무만 중시하고, 객관적, 전면적, 거국적적 차원에서 문제를 못하는 점; 셋째, 평균주의로 인한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한편 빈부격차도 줄여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 넷째, 국가와 시장의 이중적 가격체제로 인한 가격 혼란;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각하고, 통일된 환율제도의 부재 등이 있다.

한편 북한의 경제발전은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내부적 어려움으로는 1. 경제정책 가이드라인 문제.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관리 방법이라는 큰 방침은 정해졌으나 정책 세분화 및 시행 등 정책 완전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 명

확한 정책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기층 간부들이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2. 자금문제. 공장에 경영권이 주어져도 유동자금이 부족해 설비를 구입할 수 없다. 국가의 경우, 우선 세수가 없고, 또 수출로 외화를 벌수 있는 기회가 없어 국가 재정이 부족하다. 3. 신용문제. 투자환경에서 신용결핍문제가 심각하고, 외국투자자들 시장 진입 장벽 완화 필요 등 문제가 있다. 외부요인으로는 국제 제재로 인한 외국인 투자 이탈 문제와 협력방식의 문제가 있다. 북한 기업은 외자, 합영, 합작 3개 모델 중 합작 방식을 선호하는 반면, 외국투자자들은 독자 혹은 합영 방식을 선호한다. 북한은 장기적인 협력보다는 국제 제재로 인한 일시적 어려움을 외국인의 자금과 설비를 통해 극복하고 국산화, 자주화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안전하고 장기간 협력할 수 있는 상대를 찾으려고 한다. 이러한 갈등을 잘 해결하고 협력의 공동이익을 조화롭게 분배하는 것이 투자 유치와 국가 간 협력을 확대하는 관건이다.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는 7차대회 이후 설정한 발전전략 목표를 완성하지 못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총결했다. 과거와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은, 최고지도자가 국가경제발전 전략을 제정, 집행하는 과정에 나타난 문제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전면적인 성찰을 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근본원인을 북한 내부에서 찾은 것에 있다. 또한, 국가 경제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 나타난 두 가지 극단적 현상을 지적했는데, 하나는 목표의 과대설정으로 실현가능성이 떨어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목표를 현상유지 정도로 설정함으로써 큰 포부가 없었다는 것이다. 집행 차원에서도 몇 가지 문제가 존재했다. 각급 당 조직은 당의 정책을 관철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간부들의 소극적이고 명철보신하려는 사상이 전략방침의 확실한 실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8차당대회에서 향후 5년간의 국가경제발전목표와 각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러한 전략을 관철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정비보강"으로 확정하였고, 경제사업의 중점을 자강력 공고화 및 내실화로 설정했다. 또한 과학기술과 인재 양성을 중시하는 것을 전제로 공장의 개축 및 현대화를 잘 추진하여, 북한 스스로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자력으로 자립민주경제의 기초를 공고히 할 것을 요구했다.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중심 임무로는 1.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고 2. 주요 공업 부문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여 경제생산을 활성화하며 3. 농업 부문의 물자 기술 기반 향상하고 4. 경공업 부문 원재료의 국산화 비율을 높여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는 것이다.

2021년은 북한 노동당 8차당대회에서 제시한 향후 5년간 국가경제발전전략이 실시된 첫 해이다. 북한은 비판과 자아비판 방식으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다음 단계 발전목표를 명확히 했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가 어떻게 만리마(萬里馬) 속도로 발전해 나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SICS)

(03063)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509호
소장실: 02-740-1650 / 연구교수실: 02-740-1651~4 / 대표전화: 02-740-1654
대표메일: sics@skku.edu / 홈페이지: <http://sics.skku.edu>

Copyright 2013 Sungkyun Institute of China Studies, All rights reserved.